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갈등 왜? ▶2

진도 해상 뺑소니 상선 잡혀 ▶6

문예창작촌 연 문순태 작가 ▶1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광주 온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15

제19437호 1판 2013년 3월 6일 수요일 (음력 1월 25일)



홍매화의 수줍은 봄맞이
경칩인 5월 낮 최고기온이 광주 14.5도, 순천 14.3도까지 오르면서 순천시 매곡동의 한 주택에 흥매화가 화사하게 피어 성큼 다가온 봄을 실감하게 한다. 기상청은 이 달 중순까지 평년 기온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하순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軍비행장 이전 길 열렸지만...

국회 이전특별법 통과…지자체 비용 부담·대체부지 확보 등 난제 산적

50년 가까이 광주시민에게 전투기 소음 피해를 안겨준 광주 군용비행장을 도심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도심 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의원 23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3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며,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내 도심 주변 군공항은 광주 광산구 군용비행장을 비롯한 대구 동구 군공항인 'K2', 수원의 수원비행장 등 8곳이다.

김동철(광주 광산갑)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군사 작전 등을 고려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한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했다.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새로운 공항을 개발하는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먼저 지출한 뒤 기존 공항의 매각 대금으로 이를 충당도록 한 것이다.

또 재정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이전대상을 기준의 넓은 개념인 '전술 항공작전기지'가 아닌 대통령이 정한 기준으로 한정했으며, 지원대상지역도

제도 산적해 있다.

또 이전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군공항 이전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이전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 등도 우려된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1964년 광주 군공항 창설 이래 49년이란 긴 세월 동안 1만9000세대, 5만3000여명에 이르는 광주시민들이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는 지난 2004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10년의 집요한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우여곡절로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지자체의 엄청난 이전 비용 부담, 사업기한이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에 따른 사업 지연 등 해결해야 할 과

아파트 '불통 담장' 허물고 친환경 '소통길' 만든다

광주시 11개 단지 선정, 연내 40곳 조성

광주시 서구 치평동 A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중학교에 가기 위해 서는 바로 옆 B아파트를 거쳐가면 빠르다. 하지만 철제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어 수백미터를 돌아가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철제 울타리' 일부분이 사람 한 명이 통과할 정도로 뚫리긴 했지만, 속칭 '개구멍'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주민은 이곳을 지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시는 최근 광주 지역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소통길을 희망하는 9개 아파트 11개 단지를 우선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소통길 희망 아파트는 ▲서구 금호3차 아파트~라인대주 아파트 ▲서구 중흥아파트 1단지~마제근린공원 ▲북구 상록 아파트~문흥 대주 3차 아파트 ▲광산구 신창부영아파트 6차~보행자 도로 ▲광산구 신창부영 아파트 7차~보행자 도로 ▲광산구 첨단 부영아파트 7단지~대상공원 ▲첨단 YMCA 어린이집~대상공원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차단벽이나 철제 울타리가 이웃 아파트 또는 인근 공원, 어린이집, 편의시설 밀집지역을 가로막고 있어 길게는 수백 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주민 동의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아파트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철거할 방침이다. 철거된 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과 건축 디자이너의 조언 등을 종합해 아파트의 작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독창적인 소통길을 만들기로 했다.

광주시 노원기 녹지기획 담당은 "도심 속 아파트 벽을 허물어 주민간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조직법 결국 3월 임시국회로

새정부 국정공백 장기화

'박근혜 정부'의 뼈대를 만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개정안은 여·야 간 극한 대치 끝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못해 처리 시점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관련기사 4면〉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이 같은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국정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사

실상 '비상 국정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물 정부'가 현실화함에 따라 경제·안보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확충 등 민생이 뒷전으로 방치되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 각 부처의 경우, 수장의 공백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시행 등 핵심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17개 부 장관 내정자 중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제택된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등 7명에 불과하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히

지 않았다.

이라다 보니 박 대통령은 이날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2주 연속이다. 대신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만 열렸을 뿐이다.

이에 따라 내각의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국무를 쟁기는 방안이나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각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 ~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임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2013년 봄,
보다 짧고 세련된 모습으로 월간 **月刊 藝鄉**이
돌아왔습니다.

호남과 세계를 잇는 잡지
호남인의 삶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한 잡지
호남을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 예술 교양지
월간 예향은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는
잡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잡지는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대표잡지로 불리며
18년간 매달 독자들의 손에 안기던
월간 藝鄉은
아쉽게도 2002년 봄 휴간을 맞게됩니다.

예향 복간호(4월호) 3월 마지막주 발매
정기구독 신청 접수중 062-220-0550